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평가 현황과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 시사점 연구

Study on Evaluation of Implementing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nd Implication of Anti-Corruption Policy

장 진 희(Chang, Jinhee)* · 조 은 경(Cho, Eunkyung)**

ABSTRACT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in 1999 with its strong implementing mechanism that includes the category of self-evaluation and peer review. The OECD anti-bribery working group and peer examiners reviewed the Phase 3 for Korea. Since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was ratified in Korea, Korea has tried to implement the convention and gained certain degree of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results. However the OECD pointed out Korea still faces with unclear scope of 'small facilitation payment', lack of clear rules on indirect provision of bribery, insufficient punishment of the violations, and lack of public awareness.

This study analyzes the nature of the Convention, the implementation of its mechanism and the outcome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in Korea. Also this paper addresses an analysis on the current anti-corruption system in Korea which was reviewed from the OECD Working Group.

This paper not only argues that equal and proactive efforts need to be made both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and consolidating current anti-corruption system but it also suggests Korea should support the anti-corruption policies including CSR Compliance program, legal penalty and implementation law revision at a greater scope.

Key words: 반부패(anti-corruption), 뇌물공여(bribery), OECD뇌물방지협약(the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이행 평가(evaluation on implementing)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박사수료

** EK윤리지식연구소 소장

1. 서론

1997년 OECD 뇌물방지협약이 제정되고, 1999년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에 대해 3차례에 걸친 이행 평가가 진행되었다. 협약이라는 규범이 갖는 의미는 국제적 힘의 관계 속에서 달라지고, 이를 받아들이는 협약 당사국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동 협약은 동료국간의 상호평가를 통해 그 이행을 독려하는 메커니즘을 갖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주지하다시피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뇌물을 제공한 행위 그 자체가 범법행위로 협약 당사국들이 자국법에 입각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뇌물을 주는 행위와 뇌물을 받는 행위 모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뇌물을 제공한 당사자뿐 아니라 개인이 속한 법인까지 함께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상거래의 당사자인 개인과 법인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양벌규정이 엄격한 국가들은 천문학적인 벌금 및 제재금을 기업에 부가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협약 이행 상황은 치밀하고 집요하게 동료국가들에 의해 평가되고 낱말이 공개되고 있다. 실제 해외 각국의 법치주의 현실과 시장 상황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위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협약의 이행 평가에 대한 대응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다보니 일반 개인들과 기업의 경우, 협약의 존재유무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정도이며, 상세한 진행 절차, 그리고 이행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이 매우 미약하며, 이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다. 본 협약에 대한 선행연구는 협약의 배경인 반부패라운드와 협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연구, 협약 이행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연구, 미국 부패관행법과 협약과의 비교연구 등으로 구분 될 수 있다.

먼저 협약의 배경과 내용에 대한 연구는 협약 비준 전후로 이루어졌는데, 국내에 협약이 이루어진 배경과 협약의 내용 소개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종범, 1997; 권은경·신동춘, 1998; 이상용, 1998; 장근호, 1999; 신동화, 1999; 조은경·장근호, 2000). 이중 조은경, 장근호의 연구는 협약의 구성 배경과 내용, 이행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해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 반부패라운드로서의 협약이 차지하는 위치와 국제논의 동향까지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행 심사와 평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협약이 발효한 후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협약 이행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김희철, 2000; 박지현, 2001; 김준기, 2003; 장준호, 2002; 박석범, 2004; 성문업, 2004).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협약 이행실태와 동향을 제공하는 연구에 머물렀고, 연구자 역시 외교통상부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소 등 정부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협약 이행심사와 평가에 대한 연구는 성문업의 연구가 유일하나, 2단계 심사¹⁾ 결과만 다루고 있다.

이후 협약에 대한 연구는 일정기간 공백시기를 거치다가, 최근 들어 미국의 해외부

패관행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과 협약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오규진, 2011; 윤충원, 2011)가 이루어졌는데, 무역장벽으로서의 부패에 대해 주목하는 연구이다.

이렇게 OECD 뇌물방지협약이 국내에서 발효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협약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본 협약의 특성중 하나인 강력한 이행 후속조치에 대한 의미와 국내 이행의 평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2011년 3단계 심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과연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수준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법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균형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연구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동 협약의 이행 평가 현황을 상세히 연구하여 협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며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 이를 통해 정책제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동 협약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이행평가 현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국내 반부패 정책에서의 시사점을 찾는 데에 본 연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한편 동 협약의 이행평가에 대한 해외 연구의 경우 국제투명성기구와 미국부패관행법 사례집을 참조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시민사회단체로 각국의 뇌물방지협약 이행 정도를 매년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협약 당사국의 전문가를 통해 주요 항목에 대한 질문지를 보내 각 당사국의 협약 이행 및 기소에 관한 정보와 당사국 전문가의 평가를 제공받는다. 그리고 취합한 정보와 OECD의 이행보고서와 해외 언론보도 등을 분석하여 협약 당사국 전체에 대한 이행 수준을 3등급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국제투명성기구의 이행보고서를 참조하여 시민사회의 평가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미국부패관행법 사례집의 경우, 본 법에 의해 기소되거나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을 기업별로 기술한 사례집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피소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국내 협약 이행평가는 OECD 뇌물방지 작업반의 이행보고서와 국내 반부패 관련 법제를 평가의 주요 대상으로 한다. 작업반 이행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공받은 객관적 정보를 기초로 작업반의 평가와 우리 정부의 답변, 실사 보고가 포함된 비교적 방대한 자료이며, 적발 및 기소현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비공개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작업반의 이행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반부패 관련법제와의 비교 속에서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뇌물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서 국내법과의 균형이 어떠한지도 검토하며, 국내 반부패 법제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본 협약은 이행 후속조치로 당사국간의 이행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1년 3단계 심사를 받았다.

II. OECD 뇌물방지협약의 개요

1. 협약의 성격과 의의

1) 협약 체결과정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촉진을 위해 1960년 발족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는, 1997년 12월17일 OECD 29개 회원국²⁾ 전체와 비회원국을 포함하여 총 34개 국가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에 대항하는 협약(the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이하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였고, 이후 1999년 2월 15일 12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동 협약이 공식 발효되었다. 2012년 현재 38개 국가³⁾가 이 협약에 비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2월 28일 이행법률⁴⁾을 제정·공포⁵⁾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게 되었다.

2) 협약 제정 배경

OECD 뇌물방지 협약은 국제사회에 만연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처벌하여, 국제상거래에서 기업들의 동등한 경쟁기회(a level playing field)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국민권익위원회, 2011)

이는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이 공정한 거래를 제한하여 국제무역과 투자를 저해한다는 인식에 기초하는데, 직접적으로는 「해외부패관행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의 제정을 통해 해외뇌물을 규제해온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추진되었다. 미국은 70년대 초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1977년 해외부패관행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자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현지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자국법에 의해 처벌하는 세계 최초의 입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매우 획기적이고 진일보한 내용이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미국기업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가 자국에 불리한 무역장벽이라

2) http://www.oecd.org/pages/0,3417,en_36734052_36761800_1_1_1_1_1,00.html

3) 2012년 현재 OECD 회원국은 34개국이며, 협약에 서명한 비회원국은 4개국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최근 러시아 대통령이 2012년 2월 1일 협약에 가입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약 4개월 이후 가입 절차가 완료되므로 하반기에는 총 39개 회원국이 된다.

4) 우리나라의 이행입법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다.

5) 우리나라는 이듬해 1월4일 OECD에 협약비준서를 기탁하였다.

고 주장, 이에 따라 미국은 이러한 실질적 이해관계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공정한 경쟁의 원칙’ 마련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계기로 OECD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방지하는 규칙의 입안을 계속 시도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 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로 하여금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 불법적 지불을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게 되면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공여에 관한 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이 구성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1994년 OECD 각료이사회가 「국제상거래에 있어 뇌물공여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the OECD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를 채택하면서 본격화 된다. 그 후 1996년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손금처리에 대한 권고’를 채택하고, 1997년 「수정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권고」를 채택하였고, 1997년 12월 17일 동 협약의 서명과 각료선언이 채택된다(조은경, 2003).

3)협약의 특성

동 협약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특성을 갖는다. 첫째, 국제상거래에 있어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로서의 의의를 가진다는 점이다. 기존의 시각과 법률에서는 뇌물수뢰행위가 부패로 규정되어 처벌되는 것이 주된 경향이었다. 그러나 동 협약에 의거하여 주는 뇌물과 함께 받는 뇌물의 중요성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뇌물수뢰행위(passive bribery)가 아닌 뇌물공여행위(active bribery)를 처벌한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협약을 비준한 38개 국가는 전 세계 국민총생산의 85%, 수출입액의 70%의 규모를 차지한다(오규진, 201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총수는 OECD가입국 34개 국가와 비가입국 4개 국가를 포함하여 38개 국가이며, 최근 러시아가 법안에 서명하고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등 세계 39개 국가가 가입한 국제협약이다. 다시 말하면 동 협약은 국제상거래에 있어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를 포괄하는 중요한 협약이다.

셋째, 협약에 대한 이행 평가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 협약은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구속력이 약한 국제 협약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동 협약이 다른 국제협약에 비해 비교적 규제가 강한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협약 가입국은 예외 없이 이행법률을 제정하고 비준해야 하는 한편,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단계적 이행평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행 평가가 체계적이고 엄

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연합 반부패협약(UNCAC, United Nations Anti-Corruption Convention)」에 비해 실효성을 갖는다.

2. 협약의 주요 내용

OECD 뇌물방지협약에 대한 논의는 협약문, 후속 및 이행조치, 이와 관련된 보완조치 등 세 부분으로 나뉘며, 협약문은 전문(Preamble), 조문(Article), 주석(Commentaries)으로 구성된다. 전문에서는 부패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점과 뇌물방지협약의 기본 정신과 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17개의 개별조항으로 구성된 조문에서는 협약의 실제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조문에서 규정하는 OECD 뇌물방지협약의 주요 내용은 첫째, 뇌물공여죄의 정의와 대상, 둘째, 제재조치와 법인의 의무, 셋째, 뇌물의 손금 불산입과 기업의 회계기준 강화, 넷째, 관할권과 범죄인 인도, 사법공조 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표1>에서 주요 조문별 내용을 요약하였다.

1) 뇌물공여죄의 정의와 대상

협약에서 ‘뇌물(bribery)⁶⁾은 사업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금전적 혹은 기타 이득을 직·간접적으로 제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범죄로 처벌되는 뇌물공여의 구성요건은 ①국제상거래에서, ②외국공무원에게 제공, ③외국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하게 하도록 할 의도를 갖고, ④직접 또는 중개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뇌물이다.

협약에서 정의하는 외국공무원(foreign public officials)의 범주는 선출직과 임명직을 막론하고 중앙 및 각종 지방정부 차원에서 봉사하는 입법(국회의원 포함), 사법, 행정직 공무원,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국가를 위하여 공공기능을 행사 하는 자, 국제기구의 관리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일당체제 국가의 당 관료와 같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개인도 공직자로 간주된다. 한편 범죄 구성요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입증되어야 한다(조은경·장근호, 2000a).

한편, 협약에서는 관례에 따라 허용되는 소액의 금품이나 편의를 위해 소규모로 제공 또는 약속되는 소액의 급행료(small facilitation payments)는 제외되었으나, 부속서와 이사회 권고를 통해 급행료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6) 협약에서는 뇌물을 bribe가 아닌 bribery로 사용하여, 금전뿐 아니라 금전적 혹은 기타 이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2) 제재조치와 법인의 의무

협약이 규정하는 처벌은,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형사처벌일 것과, 자국내 공무원의 뇌물증죄의 법정형에 상응하는 범위(기능적 동등성)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로 민사상 또는 행정상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협약은 뇌물에 대한 몰수·추징은 물론 뇌물공여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이에 대한 몰수도⁷⁾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행법률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11).

우리나라의 이행법률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서는 뇌물공여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로 인한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익의 2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법인의 의무

협약 제2조는 외국의 공무원 뇌물수수에 대한 법인의 책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자국내 법률상 원칙에 따라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설정한다. 다만 법인에 대한 형사상 책임 적용이 어려울 경우, 금전상 제재를 포함한 비형사적 제재를 취할 것을 포함한다. 다만 법인의 처벌은 자연인의 처벌이 전제되어야 하고, 해외뇌물 방지를 위해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또한 협약 주석은 법인에 부과할 수 있는 추가적 제재조치로, 벌금 이외에 ①공적 이익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정부조달 또는 기타 상업활동에서 한시적 또는 영구적 자격박탈, ③법정관리대상 지정, ④법원명령에 의한 해산 등의 행정적 조치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행법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은 법인의 처벌에 대하여는 형사적 처벌규정만 갖고 있는데, 뇌물공여 법인에 대하여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범법에 따른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2배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4) 뇌물의 손금 불산입과 기업의 회계기준 강화

협약은 뇌물의 손금 불산입 등 해외뇌물 방지를 위한 회계기준의 강화를 포함하는

7) 뇌물공여로 얻은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은 국내뇌물죄에는 없는 규정인데, 이는 협약이 뇌물공여로 얻은 이익을 사실상 박탈할 수 있는 벌금제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 1997년 이사회 개정권고는 각 당사국이 기업회계의 강화, 독립적인 외부감사, 기업 내부통제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1> OECD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협약의 주요 내용

● 제1조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범죄)	
뇌물범죄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의 정의 및 구성요건	<p>[제1조 제1항] 국제상거래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외국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공무원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고의적으로 부당한 금전 기타 이익을 제의·약속하거나 공여하는 행위.</p> <p>[제1조 제2항]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교사·권유·방조하는 등의 공모·승인 행위.</p> <p>[제1조 제4항 다] 공무원의 승인된 직무범위와 무관하게 당해 지위를 이용하는 것</p>
외국공무원 의 범위	[제1조 제4항 가] 선출직 또는 임명직을 불문하고 외국의 입법·행정 또는 사법상의 직위를 보유하는 자,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을 위하여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자, 외국을 위하여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자, 공적 국제기구의 직원 또는 대리인.
● 제2조 (법인의 책임) / 제3조 (처벌)	
제재조치 (처벌)	<p>[제3조 제1항]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인 형벌로 처벌. 국내 증뢰죄의 법정형에 상응. 충분한 자유형 포함.</p> <p>[제3조 제3항/4항] 뇌물수익에 상응하는 압수·몰수·벌금의 부과. 추가적인 민사적·행정적 제재 부과.</p>
법인의 책임 및 의무	[제2조]/[제3조 제2항] 당사국은 자국법 원칙에 따라 법인의 책임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조치 마련할 것. 당사국의 법체계상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불가시, 금전적 제재 등 비형사적 제재 부과.
● 제4조 (관할권) / 제5조 (시행) / 제6조 (시효)	
제재 시행의 기준 및 공소시효	<p>[제4조]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에 대한 관할권 확립 조치. 2개국 이상의 당사국이 관할권을 가질시, 최적 관할권 결정을 위해 협의할 것.</p> <p>[제5조] 수사 및 기소는 각 체약당사국의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름.</p> <p>[제6조] 시효규정은 그 수사 및 기소를 하는 데 적절한 기간을 허용해야 함.</p>
● 제7조 (자금세탁) / 제8조 (회계)	
자금세탁의 전제범죄 규정, 기업회계기준	<p>[제7조] 국내뇌물죄를 자금세탁 관련 법령의 전제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에 대하여도 전제범죄로 할 것.</p> <p>[제8조] 장부누락거래 및 계정 설정, 부적절한 내역의 거래, 허위기장 금지 조치와 이에 대한 민사적·행정적 또는 형사적 벌칙을 부과.</p>
● 제9조 (사법공조) / 제10조 (범죄인 인도) / 제11조(담당기관)	
국제공조	<p>[제9조] 당사국간의 사법공조 보장. 은행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사법공조 거절 금지.</p> <p>[제10조] 범죄인인도조약상 인도대상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범죄인인도조약이 없는 당사국간에도 이 협약을 법적 근거로 할 것을 고려할 것.</p> <p>[제11조] 당사국은 하나 또는 복수의 기관을 범죄인 인도요청 및 요청접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것.</p>

● 제12조(감시 및 후속조치) / 제13조(서명 및 가입) / 제14조(비준 및 수락처) / 제15조(발효) / 제16조(개정) / 제17조(탈퇴)	
협약이행 조치	<p>[제1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감시·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후속조치 프로그램의 수행에 상호 협력할 것.</p> <p>[제13조/14조/15조] 이 협약은 각 서명국의 법에 따라 수락·승인·비준됨. 이 협약은 10대 수출국 전체 수출액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5개국의 수락서·승인서·비준서의 기탁일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됨.</p>

3. 협약 수정 권고안

1) 1996년 권고안 및 1997년 수정 권고안⁸⁾

동 협약은 협약문의 약속과 더불어 좀 더 넓은 범주내의 원칙적인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1996년과 1997년, 그리고 2009년에 걸쳐 권고안 및 수정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1996년 권고안은 간접적으로 뇌물공여행위를 조장하는 조세상의 규제조치를 억제하기 위한 한 장치로서 각 당사국이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된 뇌물의 손금 불산입을 권고하고 있다.

1997년 수정 권고안은 뇌물방지와 적발을 위한 전제 조건은 정상적인 회계제도의 도입에 있다고 간주하고 이를 위한 조치를 규정한 내용이다. 이 중에서 적절한 회계기준의 요건, 독립적 외부감사, 기업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조은경·장근호, 2000a).

2) 2009년 권고안

OECD 각료이사회는 2009년 11월 26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추가적 뇌물방지를 위한 이사회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Fur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를 채택한다. 2009년 이사회 권고는 조세, 원조개발, 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집약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진일보한 협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엔반부패협약 비준에 따른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2009년 이사회 권고는 협약 논의 과정의 여러 쟁점들을 조율한 1997년 이사회 개정 권고(OECD, 1997)와 비교해 볼 수 있다. 1997년 개정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뇌물의

8) 조은경·장근호(2000a)에 따르면, 협약(convention)과 권고안(Recommendation)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협약이 형법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인 약속인 반면, 권고안은 좀 더 넓은 범주내의 원칙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부패방지협약에 포함된 1996년 및 1997년 수정 권고안은 협약과 같은 구속력을 지닌다.

손금 불산입과 기업의 회계기준 강화, 정부조달에서의 투명성 제고, 부패척결을 위한 다자간 공동노력 등을 권고하는 것이다.

2009년 이사회 권고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의 범죄화, 뇌물의 세금감면, 외국 뇌물에 대한 신고, 회계 요건·외부 감사와 내부통제·윤리 및 준법감시, 정부 조달을 포함하는 공적 특혜, 공적 수출 신용, 국제 협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후속 조치를 위해 OECD 재정위원회, 개발원조위원회, 투자위원회, 공공행정 위원회, 수출신용과 신용보증 작업반 등과 협력할 것과 동 권고의 충실한 이행을 감독·촉진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후속조치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을 OECD 뇌물방지 작업반에 지시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11).

2009년 이사회 권고의 특징은 상기한 항목들이 상당한 구체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간 협약에서 명시되지 않거나 유보되어, 협약 당사국간에 쟁점이 되어왔던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협약에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회원국에 따라 유보적으로 인정해온 소액 급행료에 대해서도 이를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즉, 2단계 심사를 통해 각국의 이행정도를 평가해오면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이사회 권고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민간기업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장려함으로써 민간부패에 대한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2009년 이사회 권고는 동 권고의 이행을 위한 모범 관행 지침을 부속서로 채택하여, 뇌물방지 시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부속서1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협약의 특별 조항 이행을 위한 모범 관행 지침’으로, 뇌물제공 범죄, 법인의 책임, 중개인을 통한 증뢰의 책임, 법집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부속서2는 ‘내부통제, 윤리 및 준법감시에 관한 모범 관행 지침’으로 기업을 위한 모범관행 지침과 재계 단체와 전문가 협회 활동을 위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기타 권고안

OECD는 앞서 언급한 세 차례의 이사회 개정 권고 이외에도 협약 이행을 위한 진전된 권고를 내어 놓았는데, 1996년 채택된 ‘양자 원조 조달에 관한 반부패 개발원조위원회 권고’, 2000년 채택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2006년 채택된 ‘뇌물 및 공적 수출신용에 대한 권고’, 2009년 채택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추가적 뇌물방지를 위한 조세조치 이사회 권고’등이 그것이다(국민권익위원회, 2011).

III.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 평가

1. OECD 뇌물방지협약 1·2단계 이행 평가

1) 협약 이행 평가 방식과 의미

국제협약은 각국에게 통일된 규정을 부여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협약은 협약 당사국의 이행의지가 없으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저 ‘망신과 비난(Naming and Blaming)’을 받으면 그만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협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이행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체제와 규정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OECD 뇌물방지협약은 이행체제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어, 협약 이행에 대한 당사국간 규제가 비교적 높은 국제규범이다.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과 후속조치에 대하여는 협약 제12조에 제시되어 있는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후속조치 프로그램의 수행에 있어 상호 협력할 것이 포함된다.

동 협약은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감독 및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위원회(CIME) 산하에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공여에 관한 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이하 뇌물방지 작업반 또는 Working group)’이 활동하고 있다.

뇌물방지 작업반은 1999년부터 2000년 4월까지 진행되는 1단계 평가⁹⁾에서 협약준수를 위한 각 당사국의 법문안과 권고안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심사하기로 하였고, 2000년 하반기부터 2005년까지 시행할 2단계 평가에서는 각 당사국 규제조치의 구조와 적용 그리고 1997년 개정권고안에 제시된 비형사적 조치의 이행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평가 방식은 심사제도(review mechanism)와 동료압력(peer pressure)을 활용하여 각 당사국의 이행을 촉진시키는 체제이다(OECD, 2011a). 협약의 이행평가는 자기평가와 상호평가로 구성되는데, 자기평가는 협약과 권고 이행에 대한 질문지에 자기평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고, 상호평가는 동료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기본 골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당사국마다 2개의 당사국이 주심사국이 된다. 주심사국은 뇌물방지 작업반과 함께 해당 국가의 협약 이행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는 당사국 정부가 제출한 문서를 기본으로 하는 서류심사와 당사국에 방문하여 관련기관의 담당자를 면담하며 심사하는 실사(on-site visit)의 두 단계를 거

9) 1단계 심사는 비준 지연과 부족한 재정지원으로 2000년까지 7월까지 21개국 대한 평가가 완료되었고, 2003년 말까지 35개 가입국 중 슬로베니아와 터키를 제외한 33개 가입국에 대하여 1단계 심사를 완료하였다.

친다. 주심사국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회원국 전체에 내부 회람한 후, 전체회의에서의 최종평가를 통해 최종보고서를 채택한다. 최종보고서에는 심사대상 국가의 이행에 대한 평가와 미이행 사항에 대한 당사국의 견해, 협약 이행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포함된다.

심사제도와 동료압력의 효력은 최종 보고서 발간을 위한 전체 수검회의에서 발휘된다. 주심사국과 뇌물방지 작업반에서 실사 등을 통해 작성한 중간보고서의 내부 회람을 마친 후 열리는 전체 수검회의는, 수검국과 협약 당사국이 한자리에 모여 심사대상 국가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와 답변을 듣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내리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최종보고서 채택시 수검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보고서에는 포함되지만 보고서 채택 자체를 저지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같이 채택된 보고서는 OECD 정식 간행물로 출판되며 대외적으로 공개된다. 이 과정에서 회원국간 제도개선이나 이행을 위한 직·간접적인 동료 압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수검국은 1년 내에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채택한 조치 등에 관해 작업반에 보고(구두보고)하여야 하며, 2년 내에 이를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박석범, 2004).

38개 협약가입국에 대한 이행평가는 현재 3단계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1단계 심사는 입법심사로서 협약이 당사국의 국내법에 반영된 실태를 심사하는 것이고, 2단계 심사부터 서면심사, 질의서 심사, 실사의 단계를 갖는 본격적인 이행평가이다.

2) 우리나라의 1단계 심사 : 입법심사

1단계 심사는 협약에 필요한 국내법률을 제정하는 각국의 관련 이행입법에 대한 검토와 조사로 이루어진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체계에 따라 형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특별법률을 제정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의 개정 등을 통한 이행입법을 고려하였으나, 비준 일정 등의 문제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한 직후 입법 작업을 진행하여 1998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행입법을 하였다. 우리나라 이행법은 상당부분 OECD 뇌물방지협약의 문안을 그대로 옮겼다.

우리나라는 1999년 7월 회원국 중 네 번째로 1단계 심사를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협약의 내용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뇌물 및 소액 급행료의 정의와 소액 급행료의 면책규정의 입증책임문제 및 관할권 공백문제 등이 지적되었는데, 주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OECD는 우리나라 법 제3조는 ‘뇌물(bribe)’을 제공, 공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과 기타 부적절한 이익 공

여를 처벌하도록 한 협약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의 해석일 수 있다. 이에 대해 ‘뇌물’이 ‘부패행위(corrupt thing)’를 뜻한다는 한국정부의 설명이 있으나 뇌물이라는 어휘는 협약의 적용에서 문제시 될 수 있다는 것이 작업반의 입장이다.

둘째, 소규모 금품 또는 기타 이익을 예외로 하는 조항(이행법 제3조 제2항 2)의 경우 법이나 판례상 소규모 이익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작업반에 따르면 한국의 주장대로 소규모 뇌물의 입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하지만 법 적용에 있어서 소규모 뇌물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며, 이는 2단계 평가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았다.

셋째, 우리나라의 법은 뇌물이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지적이다.

넷째, 우리 법 제5조를 엄밀하게 해석하면 제공된 뇌물이 변형되어 제3자가 소지할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없다. 하지만 형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변형된 자산 또는 뇌물에 상당한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다섯째, 관할권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경우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국내에 있고 범인인도 요청이 없을지라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인데, 이는 모든 국가에 공통된 문제이므로 향후 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이다.

3) 우리나라의 2단계 심사 : 이행심사(OECD, 2004)

2002년까지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1단계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2001년 3월 핀란드를 시작으로 2단계 심사작업이 본격화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4년 2단계 심사를 받아, 2004년 11월 최종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의 2단계 심사는 핀란드와 호주가 주심사국으로 지정되었다. OECD 뇌물방지 작업반은 실사에 앞서 서면심사 질의서를 보냈고, 우리나라는 서면심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2003년 12월 OECD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작업반과 주심사국은 2004년 2월 2일부터 6일까지 방문 실사를 실시하였고, 2004년 6월 수검 심사회의를 거쳐, 2004년 11월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었다.

2단계 심사에서 우리나라가 보고한 해외뇌물 위반에 대한 처벌 사건은 2건으로, 미 8군 계약처장(현역 육군대령)에게 2천억원 상당의 건설사업계약을 수주받기 위해 6억원의 뇌물공여를 약속하고, 4억원을 제공한 Aulson and Sky Ltd.와 대표가 기소된 사건과 미 8군 회계담당직원에게 미군 군납조달 자격을 얻기 위해 36회에 걸쳐 뇌물을 제공한 서OO씨 사건이다.

2단계 심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실사단은 정부부처, 기업 및 시민단체 대표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였는데, 주로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뇌물방지 노력과 OECD협약에 대한 인지도’, ‘검찰과 경찰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규정의 운영 현황과 단속실태’, ‘뇌물방지를 위한 회계·감사규정의 구비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전체회의를 거쳐 채택된 2004년 최종보고서에서 주로 거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협약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 : 작업반은 우리 법무부가 1999년도에 이행법에 대한 설명책자를 검찰, 경찰 및 업계에 배포한 바 있으며, 부패방지위원회가 2004년 협약가이드북을 국내기업과 정부기관에 배포하여 국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국내 민간기업의 경우 내부 윤리강령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해외뇌물 금지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② 부패행위 적발을 위한 정부 신고체계: 작업반은 부패방지법이 일반인 및 공무원이 인지한 부패혐의사실을 주무당국에 보고할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등을 평가하였다. 다만 외국공무원 증뢰혐의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부패방지위원회 이외 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③ 형법 20조 사회상규 예외의 국내 이행법에 대한 적용 배제: 형법 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이 협약에 적용되지 않아야 할 것을 제기하였다.

④ 뇌물의 손비 불산입: 작업반은 뇌물액을 기업활동 비용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공제시키지 않도록 할 것에 대해, 우리나라 조세관련 법규에 명시적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⑤ 정부기관 수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감독권 강화: 작업반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국제협력단과 같은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수주를 통해 해외활동을 전개하는 기업에 대한 감사 및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⑥ 해외뇌물의 처벌 형량: 작업반은 우리나라의 처벌사례의 경우 법인에 부과한 벌금형이 미미하여 처벌의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처벌형량을 높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⑦ 미수행위 처벌 여부: 작업반은 우리 형법 133조가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약속, 공여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반해, 국내 이행법에는 해외뇌물의 미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⑧ 제3자 수익자 조항: 작업반은 OECD 뇌물방지협약이 ‘공여자와 외국공무원이 공모하여 제3자에게 뇌물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이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2단계 심사 결과 다음 6개항(세부항목 포함시 14개항)을 권고하였고, 권고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OECD 뇌물방지 작업반의 대한민국 2단계 심사에 대한 권고

1) 해외뇌물의 예방과 적발을 위한 효과적 조치를 보장하기 위한 권고	
권고1	인식제고: 협약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를 위하여, 훈련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수사기관·기소 및 사법기관의 인식을 높이고, 협약이행에 간접적인 기관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 특히 중소기업의 협약준수를 지원할 것
권고2(a)	회계기준, 외부감사, 내부통제: 독립적 외부감사나 관리위원회가 뇌물공여의 징후를 담당기관에 신고하는 조치
권고2(b)	회계기준, 외부감사, 내부통제: 정부나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관으로서 한국기업에 계약기회를 주는 기관(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으로 하여금 해외뇌물 혐의가 있는 기업을 감사하는 권한을 갖게 할 것
권고3(a)	해외뇌물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나 정부기관에 신고하는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확대할 것
권고3(b)	한국국제협력단의 정보공개정책과 절차를 조사하여, 해외뇌물방지법 위반시 주무당국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
권고3(c)	한국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약을 준수하게 하고, 한국기업으로 하여금 해외에서 뇌물에 연루될 경우 정부에 보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안내할 것
권고3(d)	형법20조*의 사회상규 관련조항은 동 협약에 적용되지 않음을 보장 할 것 *형법20조(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권고4(a)	뇌물의 손비 인정을 금지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할 것
권고4(b)	조세심사관에게 뇌물손비 불산입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훈련 할 것
2) 해외뇌물의 효과적인 기소와 처벌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	
권고5(a)	제3자를 통한 뇌물공여 처벌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는 이행법 제3조1항을 명확히 하여, 형법의 제3자 뇌물조항과 조율하게 할 것
권고5(b)	법무부 발행 설명책자를 검토하여, 협약 가이드라인이 포함되도록 할 것
권고6(a)	벌금의 현실화, 특히 뇌물수익 몰수가 어려운 경우 효과적이고, 균형적이고, 예방적으로 벌금을 현실화시킬 것, 허위기장과 부정감사에 대한 벌금을 늘릴 것
권고6(b)	뇌물수익 몰수와 집행유예를 포함한 이행법 처벌에 대한 통계 정보를 관리할 것
권고6(c)	개발원조와 민영화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뇌물 발생시 주무당국에 대한 정보제공, 추가적인 비형사적 처벌과 같은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것

자료 : OECD. (2004). KOREA: Phase 2 report on the applica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the 1997 recommendation on combating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November 2004

2. OECD 뇌물방지협약 3단계 이행 평가

1) 3단계 평가 개요(OECD, 2011)

우리나라의 3단계 심사는 핀란드와 이스라엘이 주심사국으로 지정되었다. 우리 정부는 2007년 3월, 2단계 심사에서 제기된 이행권고에 대한 답변서를 OECD에 제출하였다. 작업반과 주심사국은 2011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방문 실사를 실시하였고, 2011년 6월 수검 심사회의를 거쳐, 2011년 11월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었다.

OECD 뇌물방지 작업반은 우리나라가 2단계 이행심사 협약 이행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는데, 특히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제정과 상법개정을 통한 기업의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9건의 적발·처벌건수 등이 고무적으로 평가 되었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 범죄수익의 몰수, 소액 급행료, 제3자 뇌물 등 1·2단계 심사에서 제기되었던 쟁점들이 대부분 다시 제기되었다. 특히 작업반은 한국의 해외뇌물 처벌의 미약함을 지적하며 효과적이고 균형 있고 예방적인 처벌을 보장할 것,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윤리와 준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채택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세무감사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조세당국으로부터 해외뇌물 혐의 발생에 대해 사법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추가로 권고하였다.

이렇게 3단계 심사가 중점적으로 지적하거나, 후속조치를 권고한 사항들은 대부분 2009년 이사회 추가적 권고와 그 부속서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는 2009년 이사회 추가적 권고가 향후 협약 이행에서 주목해야할 사안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협약 위반 사건으로 2011년까지 9건의 처벌사건을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한 건을 제외한 8건의 사건이 모두 미군과 관련된 뇌물범죄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2005년 이전 사건인 6건의 사건 수사기록이 폐기되어 사건에 대해 정확한 검토가 불가능한 점과 처벌의 비실효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다음 <표3>은 1999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기소·처벌된 우리나라의 해외뇌물 사건이다.

<표3> 한국의 해외뇌물방지법 기소 사건(1999. 2~2011.10)

사건명	기소·판결일	판결	뇌물가액	사건 개요
1.Aulson and Sky Ltd.	2002년 기소 2002년 항소심 판결	법인> 벌금 1억원	6억원 제공약속, 5회에 걸쳐 40만달러 (4억원) 제공	미8군 계약처장(현역 윤군대령)에게 약 2100억원의 건설계약을 위해 뇌물 제공. 중개인: 미군 조달공무원
		대표 정OO> 징역 18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원		

사건명	기소·판결일	판결	뇌물가액	사건 개요
2. 서OO (군납업체)	2003년 기소 2004년 판결	징역 10개월 벌금 1천만원	36회 총 5100만원	미8군 회계담당직원에게 입찰자격 획득을 위해, 미군수사관에게 수사 중지를 위해 뇌물 제공.
3. 지OO (군납업체)	2004년 기소 2004년 판결	벌금 7백만원	28회 총 1150만원	미군 구매담당직원에게 납품 편의제공을 위해 뇌물공여
4. 안OO (군납업체)	2004년 기소 2004년 판결	벌금 1천5백만원	370만원	정보없음
5. 청소업체	2004년 기소 2004년 판결	고OO> 7백만원 윤OO> 3백만원	3600만원 (USD 34,000)	미군 조달담당직원에게 청소용역 갱신을 위해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사업팀장에게 뇌물공여 지시 및 직접공여
6. JoBros Co., Ltd.	2004년 기소 2004년 판결	법인> 5백만원 노OO> 5백만원	1630만원 (USD 16,000)	미군 조달담당직원에게 가구공급계약을 위해 뇌물 및 입찰 서류 위조
7. 경비용역 업체	2006년 기소 2007년 판결	위OO> 징역4년, 벌금 2백만원 박OO> 징역8개월 벌금 2백만원 중개인> 무죄	총 3억5백5십 만원 (USD 290,000)	미군 조달담당직원의 처남의 중개로 경비용역 계약을 위해 뇌물 제공 및 조달 정보 제공받음. 업체 근로자 제보로 적발.
8. 삼성 Rental Co., Ltd.	2006년 불구속 기소 2008년 판결	법인> 2천만원 정OO> 1천만원	2천1백만원 뇌물 제공. 1억3천만원 상당 향응. BMW제공 약속 등	미군 조달담당직원에게 미군 통신서비스 계약 수주 및 계약유지를 위해 2001년부터 41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 제공. 미국OSI 수사로 공조수사 2009년 미국에서 기소됨.
9. 상인회 임원	2008년 기소 및 판결	오OO> 2백만원 김OO> 2백만원 장OO> 1백만원	520만원 상당의 물품 2150만원 뇌물공여.	중국 세관 공무원에게 상인회 대표와 부대표가 통관편의를 위해 뇌물공여 중국상인의 신고로 적발

자료 : OECD. (2011). Phase 3 report on implementing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in Korea. October 2011; Fritz Heimann, Gillian Dell & Kelly McCarthy. (2011). Progress report 2011- enforcement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Transparency International

2)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 성과

OECD 뇌물방지 작업반의 3단계 심사는 먼저 우리나라가 제출한 서면 답변서(2단계 6개 권고에 대한 자기평가서)에 대한 검토로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제출한 2단계 권고에 대한 이행성과는 다음과 같다.

권고2(b): 한국기업에 계약기회를 주는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이 해외뇌물 혐의 기업을 감사하는 권한을 갖게 할 것
 권고3(c): 해외시장에서 한국기업이 적극적으로 협약을 준수하게 하고, 한국기업으로 하여금 해외에서 뇌물에 연루될 경우 정부에 보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안내할 것
 권고3(d): 형법20조의 사회적 관습 면책조항은 동 협약에 적용되지 않음 보장
 권고4(a): 뇌물의 손비 인정을 금지하기 위한 세법 개정
 권고4(b): 조세심사관에게 뇌물손비불산입에 대한 정보 공유, 교육훈련
 권고5(b): 법무부 발행 설명책자에 협약 가이드라인 포함
 권고6(b): 뇌물수익 몰수와 집행유예 등 이행법 처벌에 대한 통계 정보 관리

OECD 뇌물방지 작업반은 실사를 통해, 서면 답변서에서 미이행 되었던 권고가 이행되었음을 평가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권고1: 훈련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수사기관·기소 및 사법기관의 협약 인식제고, 기타 기관 등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특히 중소기업 협약준수를 위한 지원
 권고3(a): 해외뇌물 신고에 대한 공익제보자의 보호 확대
 권고3(b): 한국국제협력단의 정보공개정책 도입으로 해외뇌물방지법 위반시 담당기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
 권고6(c): 추가적인 비형사적 처벌

OECD 뇌물방지 작업반의 3단계 심사에서는 2단계 권고에 대한 상기 평가 이외에, 수검회의 등을 통해 협약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심사하였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 주요 성과이다.

첫째,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제정이다. 그간 OECD는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충분치 못한 점을 지적해왔었고, 신고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되어 있어 이를 확대할 것과 제보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지적해왔는데,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진일보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

둘째,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이다. OECD는 그간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기업내부 규제를 권고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상법개정을 통해 상장기업에 대한 준법지원인 제도를 2012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 받았다. 그러나 새로 도입될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재계는 이 제도가 변호사 밥그릇 챙겨주는 제도이자 기업에 대한 최강도의

규제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는 준법지원인 제도가 충분한 공론 없이 도입되면서 자격요건이나 주요 업무 등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의의가 퇴색되고 오히려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도구로 되거나,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제도와 같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¹⁰⁾

셋째, OECD 뇌물방지 작업반은 그 밖에 9건의 건수 적발·처벌건수, 법무부·외교통상부·대검찰청 합동 정보수집기구의 신설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3) 미이행 권고와 주요 쟁점

가) OECD 뇌물방지 작업반이 지적한 미이행 권고사항

권고2(a): 독립적 외부감사에 의한 신고·보고 조치
 권고5(a): 제3자 뇌물공여 처벌에 대한 명시적 조항
 권고6(a): 효과적이고, 균형적이고, 예방적으로 벌금을 현실화시킬 것

상기한 미이행 권고사항 이외에 OECD 작업반은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이 불충분하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사항을 지적¹¹⁾하였는데, 이 중 입법심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항과 향후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에 비교적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지적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1단계 입법심사에서 3단계 심사까지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

① 급행료 금지

매 심사마다 지적되었던 급행료 금지 권고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국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결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소액급행료 사례는 매우 적고, 뇌물과 혼동될 일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작업반은 한국 기업인들에 대한 실사과정을 보고하면서, 급행료 관행이 있다고 답변한 기업이 있었고, 급행료를 뇌물과 혼동하는 기업인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실사에 응한 기업인은 급행료 금지, 주의·감독 등에 대한 법인의 책임과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공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10)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1/31/0302000000AKR20120131147700004.HTML>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20538141&sid=0106&nid=009<ype=1>

11) 3단계 심사 최종보고서의 본문인 section B에서는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에 대해 해외뇌물 범죄, 법인의 책임, 뇌물과 뇌물수익의 몰수, 수사와 기소, 자금세탁, 회계기준·외부감사·준법윤리프로그램, 세금 관련 조치, 공공의 인식제고와 해외뇌물 신고, 공적 이득 등 10개 항목별로 미이행 사항에 대해 보고하였다.

② 제3자 뇌물

작업반은 제3자 뇌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문제를 다시 지적하면서, 2단계 심사에서 요구했던 제3자 뇌물 처벌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제3자가 외국공무원과 접촉·통신하는 한 뇌물로 처벌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③ 벌금 실효성

작업반은 9건의 사건들을 검토하면서, 2단계 심사에서 지적된 벌금형의 미약함이 개선되지 않아 재발방지의 효력을 갖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주심사국은 벌금액의 미약함 뿐 아니라 뇌물 수익에 대한 몰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④ 공동정범과 중범, 중개인에 대한 처벌

이는 ‘뇌물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것’, ‘제3자 뇌물에 대한 처벌 명확화’ 등과 함께 매 심사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형법30조를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작업반은 보고된 사건 중 ‘7.경비업체 사건’의 경우 미군의 처남이 중개인의 역할을 하였으나 처벌받지 않았음을 밝히며, 형법30조가 범죄에 대한 기능적 통제를 보장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다) 주목해야 할 지적사항

①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작업반은 9건의 보고된 사례 중에서 법인을 처벌한 사건은 모두 3건에 불과하고, 면담한 기업인 대부분이 법인의 형사적 책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국에서 기업을 처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기업은 증권거래법,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등 타법에서 규제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작업반은 법인 처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제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② 법인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 면책 요건

작업반은 우리 이행법이 법인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있을 경우 법인이 면책되는 조항은 있으나, 상당한 주의와 적절한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법리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있으며, 기업은 사건별 기준에 따라 다루어진다고 답변하였다. 더불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③ 뇌물범죄 수익 몰수

작업반은 최근 한국정부가 검찰청에 몰수전문기구를 설치한 성과를 인정하였으나,

아직까지 해외뇌물에서 몰수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④ 기업 내부통제제도

작업반은 2010년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준법 가이드라인 수립 의무와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된 점을 평가하였으나, 실사 결과 회계와 감사 전문가들에 대한 해외뇌물 위반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음을 우려하였다. 또한 준법지원인 제도가 중소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에 도입되도록 권고하였다.

⑤ 외부 감사인에 의한 혐의거래 신고의무

작업반은 외부 감사인 또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해외뇌물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성실신의를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신고한 감사인을 보호하여, 감사인이 신고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할 것을 권고하였다.

⑥ 개성공단의 협약 적용

주심사국은 개성공단을 외국으로 간주하여, 해외뇌물법을 적용할 것을 지적하였고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개성공단을 협약에 적용할 수 없고, 뇌물적발시 한국 형법의 뇌물죄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작업반은 개성공단에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북한 공무원을 외국공무원의 범주로 보고 협약에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남북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OECD 실사단의 몰이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능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보인다. 개성공단 문제는 협약이행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로서, 만일 개성공단을 협약에 포함시킬 경우 한미FTA와 같은 사안에서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의 전례가 될 것이다.

4) 3단계 최종보고서 권고와 후속조치

OECD 뇌물방지 작업반은 3단계 심사 결과로 10개항을 권고하였다. OECD 이행체제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2년 10월 작업반에 이 권고에 대한 이행 성과를 구두보고하고, 2013년 10월까지 서면보고(자기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3단계 권고는 다음과 같다.

<표4> OECD 뇌물방지 작업반의 대한민국 3단계 평가에 대한 권고

1) 해외뇌물의 효과적인 수사·기소·처벌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	
권고1(a)	개성공단의 뇌물공여에 대한 해외부패방지법, 또는 형법에 의한 처벌 담보
권고1(b)	금행료에 대한 정책과 방침 검토
권고1(c)	기업의 내부통제와 윤리·준법 프로그램을 통한 금행료 제공 금지 장려
권고2	법집행기관과 민간기업에 법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 제고
권고3	① 해외뇌물 관행에 대한 제재가 효과적이고, 균형적이고, 재발방지가 보장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② 뇌물과 뇌물수익의 몰수가 처벌의 실효성을 갖도록 강화하고 법령 검토
권고4(a)	사법공조와 이행심사를 위해 해외뇌물사건의 수사기록 적정기간 보존
권고4(b)	법무부, 외교통상부, 대검찰청 합동정보수집단에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포함
권고4(c)	수사 전단계에서 다양한 정보원을 통한 적극적 정보 수집으로 수사 강화
권고4(d)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외뇌물 위반사건의 사법기관 이송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 수립
2) 해외뇌물의 효과적인 예방과 적발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	
권고5	자금세탁방지 ①해외뇌물 범죄수익의 자금세탁의 위험에 대한 혐의거래보고 제도 관련자에 인식 제고, ②혐의거래보고 의무를 가진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총소유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③금융기관이 혐의거래보고 의무와 고객과의 이해충돌 가능성 해결
권고6	회계와 감사 기준 ①외부감사인인 해외뇌물혐의를 사법기관 등 주무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 고려, ②신의성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신고한 외부 감사인의 법적소송으로부터 보호, ③ 회계·감사 전문인에 대한 해외뇌물방지법에 대한 인식제고와 교육훈련 장려
권고7	민간기업의 조치 ①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적절한 내부 통제, 윤리 및 준수 프로그램과 조치를 채택하도록 권장(2009년 이사회 권고 부속서2 지침서 참조), ②중소기업에 대한 해외뇌물방지법 인식제고
권고8	세무에 대한 조치 ①조세당국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해외뇌물 혐의를 사법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촉진하는 조치, ②해외뇌물 혐의에 대한 대검찰청과 국세청의 체계적인 정보 공유의 독려, ③조세심사관에게 해외뇌물 적발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④국세청의 리스크 평가와 감사에 뇌물수수 포함
권고9	해외조달 책임기관 (a)공식적인 수출신용 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뇌물과 수출신용에 대한 2006년 권고를 뇌물방지 가이드라인에 적용, (b) 해외뇌물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한 공공계약 배제를 촉진하기 위해 뇌물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제도 도입
권고10	새로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해외뇌물에 대한 신고자 보호 규정 명확화와 동 법에 대한 인식제고

자료 : OECD. (2011). Phase 3 report on implementing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in Korea. October 2011

OECD 작업반은 상기 권고이외에 해외뇌물방지법의 판례와 실제 적용 현황을 작업반 후속조치¹²⁾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그 내용은 제3자 뇌물의 직접 제공에서 해외 뇌물법 적용, 외국정부 고용인의 포함여부, 법인의 주의감독에 대한 면책의 실제 적용 문제, 벌금 부과시 뇌물수익 계산 방법, 해외뇌물이 형법에 의해 기소될 경우 처벌의 정도, 사법공조 등이다.

IV. 협약 이행평가와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의 방향

1. 우리나라의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에 대한 총괄적 평가

OECD 작업반에 의한 3단계까지의 심사 결과, 우리나라는 입법사항 등 협약의 기본적인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으나, 해외뇌물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시책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이행 성과 중 입법성가를 보면, 먼저 협약과 함께 1999년 발효된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정과 2001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등이 있다. 또한 「상법」 개정으로 2012년 4월부터 기업에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한 점 등을 성과로 들 수 있다.

또한 해외뇌물에 대한 형사외적 처벌로서의 행정적 처벌이 도입된 점을 주요 성과로 들 수 있겠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해외뇌물로 사법 처리된 기업을 계약수주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뇌물규모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조달과 계약에서 배제된다. 또한 해외뇌물방지법에 의해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기업은 3년간 수출신용에서 배제된다.

그 밖의 성과로는 공공기관과 해외공관에 협약 안내책자를 배포하여 협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점, 9건의 해외뇌물범죄 처벌 실적 등이 있다.

한편 협약 이행의 미비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은 주로 2009년 이사회 권고안에서 제시하는 것들인데, 아직 불충분하여 보완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처벌의 실효성이다. 협약은 해외뇌물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이고, 재발방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의 처벌 수준이 미약하고, 수익에 대한 몰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처벌의 효력이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12) 후속조치인 권고11은 권고7과 함께 OECD 작업반에서 3단계 심사 이후 우선적으로 점검할 쟁점으로 제시되어, 2012년 10월까지 구두 보고 할 사안으로 제시되었다.

법인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지적되었다. 실제로 경비용역업체가 미군 조달담당직원에게 3억5백만원을 뇌물로 공여한 사건의 경우 벌금은 2백만원에 불과했고, 법인은 처벌되지 않았다. 2100억원의 건설계약을 위해 4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Aulson사의 경우 벌금액은 1억원이었다. 이렇게 해외뇌물의 규모에 비해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벌금액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처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도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는 2011년 이행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뇌물사범에 대한 불구속기소와 집행유예가 많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실제로 법원 통계를 보면, 2003~2007년 유죄가 확정된 뇌물사범 가운데 52.62%가 집행유예, 9.34%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다른 형사사건 집행유예율 보다 10~20%포인트 이상 높다고 한다.¹³⁾

다음으로 해외뇌물 적발과 관련한 사항이다. 우리나라는 금융기관과 조세당국이 뇌물혐의거래의 징후를 발견하게 되면 주무당국에 신고하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으나, 기업의 외부 감사인이 사법당국에 신고하는 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리고 해외뇌물범죄에 대한 정부기관인 법무부 및 외교통상부 등과 조세당국과의 정보협조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서 신고의무의 강화와 정보협조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는 해외뇌물범죄의 적발에서 상기한 기관들의 신고에 의한 실적이 전무한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3년간 9건을 적발하였는데, 적발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해외에서 적발된 사건들이 국내에서 수사되지 않은 사례¹⁴⁾들을 미루어 볼 때 우리의 해외뇌물범죄 적발의 수준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뇌물의 법리적 해석에 대한 부분으로 뇌물의 정의의 문제, 급행료 허용의 문제, 외국공무원의 범위의 문제, 제3자 뇌물의 문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먼저 뇌물 정의의 경우 포괄적 뇌물행위로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꾸준히 지적되는 급행료 금지에 대해서도 ‘소액의 뇌물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변명을 하기 보다는 현행 이행법의 급행료 허용 조항¹⁵⁾을 삭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 기업의 내부통제와 윤리·준법 프로그램, 그리고 이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의 미흡함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13) 한겨레신문, ‘대법, 양형기준안 마련…집행유예 단골 뇌물죄’ 김남일, 2008.11.24.

14) 국제투명성기구(TI)의 평가보고서에서는 OECD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해외뇌물위반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보고 외에 해외의 언론 및 민간 보고서의 사례에서 보고된 내용이다. 2009년에 보고된 2건의 사례는, (1) 대우 인터네셔널이 연루된 사건으로 UN의 원유와 식량 프로그램 관련 사건이 Volker 보고서에 보고되었고, (2) 동성건설이 필리핀의 도로사업에서 뇌물을 공여한 것이 세계은행에 의해 수사된 사건이다. 이 외에 해외기업이 국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으로는 IBM Korea가 약 550억원 상당의 정부 계약 수주를 위해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다. 동 보고서는 이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다.

15) 이행법 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2항에서는 형사처벌의 예외로, ‘일상적·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공무원등에게 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액의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라고 소액 급행료 허용을 명시하고 있다.

을 성과로 꼽고 있지만, 독립적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 요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실, 사외이사가 기업의 거수기가 되고 있는 현실, 기업에 대한 해외뇌물 금지에 대한 지도·교육 등 인식제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예방적 활동이 중요시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 협약 이행 평가 및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에의 시사점

1) 국가 경쟁력 수단으로서의 협약에 대한 능동적 이해

시민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협약 이행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통합된 이행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OECD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간과 자원의 부족으로 통합된 이행 보고서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OECD에서는 국제투명성기구에 이 작업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TI는 2005년부터 협약 이행을 압박하는 시민사회의 새도우 리포트인 ‘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 협약 이행보고서(Progress Report on Enforcement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¹⁶⁾

2011년 동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37개 국가의 협약 이행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평가되었다. 적극적 이행국가는 7개국으로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미국이며, 소극적 이행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9개국이며, 나머지 21개국은 미이행국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은 정보접근권의 제한성, 불충분한 법체계, 반부패기구의 비독립성, 공익제보자 보호의 미흡성 등이 지적되었으며, 이와 함께 급행료가 허용되는 현행법의 문제, 불구속기소와 집행유예가 많은 점 등이 소극적 이행국으로 분류되는 주된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3단계 평가에서 OECD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시민단체인 TI에서는 소극적 이행이라는 수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른 평가가 이루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첫째는 OECD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작업반과 주심을 비롯한 당사국이 회원국간에 쟁점이 되거나 자국의 미이행 사안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의 차이에서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는 각국 정부로부터 거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위치에 있는 OECD와 정보제공에 대한 비협조로 정부자료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언론 및 민간연구소 등의 정보를 보조적으로 수집하는 TI가 오히려

16) 국제투명성기구(TI)의 이행보고서는 각국의 뇌물방지협약 이행정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보고서로서 이행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협약 당사국의 전문가를 통해 각 당사국의 협약 이행 및 기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그리고 취합한 정보와 OECD의 정보 등의 분석, 그리고 OECD 작업반과의 검토를 거쳐 협약 당사국 전체에 대한 이행 동향과 수준을 평가하고, 협약 이행 수준에 따라 당사국을 3등급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OECD보다 포괄적인 사건을 언급하게 되는 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기관의 관점과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협약 미이행 사항에 대한 견해는 일치하는 편이며, 이들 두 기관이 공히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적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이의 개선을 통해 경쟁력으로 활용 가능하다.

주지하다시피 OECD 뇌물방지협약은 뇌물수뢰자가 아닌 뇌물공여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뇌물을 수뢰한 외국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다. 다만 뇌물을 수뢰한 공무원이 속한 국가의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이 회원국인 외국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뢰할 경우, 해당 기업의 국가가 자국의 기업을 처벌하게 되어, 우리나라 공무원의 수뢰행위가 국제세계에 알려지게 된다. 2010년 영국 주류회사인 Diageo Plc.의 자회사인 Diageo Korea의 직원이 한국 세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 미국의 부패관행법 사례집에 소개되기도 하였다(Shearman & Sterling LLP, 2010).

즉 OECD 뇌물방지협약이 자국 기업의 뇌물공여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자국 공무원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행위는 국제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 정부가 경쟁국가 기업의 뇌물을 수뢰한 우리나라 공무원을 적발하여 처벌할 경우, 해당 사건은 협약국가 간의 사법공조를 통해 경쟁국가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즉 반부패가 국가경쟁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국가 반부패 시스템 정비의 기회

그간 우리나라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해 국내 법제를 정비해왔다. 특히 3단계 심사까지 수검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비교적 성실히 이행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협약 이행 성과는 국내 반부패 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근거하여 이를 개선해나가는 밑그림 속에서 능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OECD의 지적사항에 대한 수동적 대응이었다. 3단계 심사를 앞두고 급히 이루어진 상법 개정을 통한 준법지원인 제도의 시행을 코앞에 둔 지금, 충분한 논의 부족으로 인한 갖은 잡음¹⁷⁾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수동적 대응의 한 사례이다. 만일 지금이 협약 발효 초반이라면 변명의 여지가 있겠으나, 협약발표 13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부끄러운 태도이다.

이러한 수동적 대응 태도의 결과 국내 뇌물관련 범죄 처벌수준과 협약의 처벌수준이 불균형한 결과를 낳았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해외뇌물의 처벌에 있어 당사국의

17) 준법지원인제 경제계 반대 <http://www.cio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65>

총리실-법제처 '준법지원인' 뽕풍계임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20207000580>

사법체계를 준용하되, 기능적 동등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그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경미하여 해외뇌물을 규제하는데 효과와 예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역으로 국내 뇌물법에 대한 처벌 수준이 협약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견된다. 이러한 국내법의 미비점은 법개정 등 법률적 보완이 필요할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인데, 우리 형법의 내국공무원에 대한 범죄에서는 법인 처벌 규정이 없어서 법인을 처벌할 수 없으나, 이행법에는 법인처벌 규정을 두었다. 물론 OECD는 우리 이행법의 법인처벌이 실효성이 약하다고 지적하며, 벌금의 강화와 형사처벌 이외의 행정적 처벌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협약의 지적을 넘어서, 부패범죄의 지능화 추세와 부패의 공급측면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우리 국내법에서 법인의 형사책임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다음은 뇌물수익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다. 이행법은 개인의 경우 뇌물수익이 1천 만원을 초과하는 때, 법인의 경우 5억원을 초과하는 때에 각각 그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뇌물공여 행위자의 이익의 다과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서의 국내 형법에서는 볼 수 없는 규정이다(오규진, 2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벌금의 경우도 수뢰액에 따른 벌금이지, 뇌물공여자가 뇌물로 얻은 수익에 대한 비례적 벌금은 아니다. 국내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비례적 조항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행법과 동등성을 갖도록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이행법은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있는데, 국내법은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어 국내 뇌물죄보다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벌금형을 병과하는 이행법과의 동등성을 갖도록 국내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법률적 불균형의 개선에 있어서도 국내 반부패 정책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려는 능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간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오고 있는 부패 및 화이트 범죄의 높은 불구속 문제, 이를 위한 공정한 양형제도의 확립, 정관민의 회전문인사 대책,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보완, 민간부패의 통제방안 확보, 공익신고자에 대한 효과적 보호장치 마련, 부패행위의 개념 확대, 비자금 등 대가성이 직접적이지 않은 부정거래의 처벌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나갈 때 비로소 협약의 이행 성과가 의미를 가질 것이다.

3) 공직부패 통제 중심의 정책에서 민간부패를 규제·선도하는 반부패 정책으로 전환

OECD 뇌물방지협약은 재무 및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기업의 다양한 노력을 제안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개정·채택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기업윤리의

광범한 주제에 관한 원칙과 기준에 구속력은 없으나 효과적인 기업부패 통제 도구이다. 2010년 11월 발효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ISO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역시 기업부패 통제와 연관된다. ISO26000은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지역사회 등 7개 핵심 주제와 37개 쟁점사항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다섯 번째 핵심주제인 공정운영관행의 쟁점사항 중 하나로 부패방지를 포함하였다. 이렇게 기업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협약 이행 평가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기업부패 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기업부패 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부패는 민간영역으로 가급적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입장을 취해왔다. ‘부패’라는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댈 경우, 자칫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로 인해 소극적 정책을 고수하게 된다면, 우리 기업이 국제상거래에서 오히려 치명적 손실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인식해야 한다. 자국 법인에 대해 천문학적인 벌금과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는 외국의 압력이 거세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소극적으로 정부가 이행 평가를 주도하고, 평가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인정받겠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가 기업들에게 협약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기업을 돕는 길이다. 기업들이 주체적으로 직원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고용계약 및 단체협약 등에 뇌물제공 금지 규정을 두고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주적인 정화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선도적인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3. 주체적 관점에서의 적극적인 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 제언

1) 이행법의 개정

OECD 뇌물방지협약과 동시에 발효된 이행법,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은 협약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협약이 주석, 이사회 권고, 부속서 등을 통해 협약을 구체화시킴으로서 협약 이행에 지침이 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우리 이행법은 법률적 보완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먼저 제1조(목적)에서 ‘뇌물’에 대한 정의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에서 급행료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제3자 뇌물공여의 처벌과 범죄를 인지하지 않은 뇌물수익에 대한 몰수 예외조항(제5조) 등이다.

2) 양형기준 확립과 몰수 추정 기준 마련

해외뇌물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위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고, 특히 법인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확립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뇌물·횡령·배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뇌물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해외뇌물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양형기준 마련만큼 중요한 것은 해외뇌물을 포함한 뇌물범죄에 대한 불구속 및 집행유예 판결을 제한하는 것이다. 뇌물범죄의 불구속율이 높으면 법률의 실효성은 커녕 사법정의도 훼손될 수 있다.

벌금형의 강화와 함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의 강화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범죄수익에 대한 계산과 은닉재산 색출 등 몰수 추징 기법의 개발과 객관적인 몰수 기준의 마련도 필요하다.

3)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신고의무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총액 100억 이상의 주식회사 등은 외부 감사인을 두고 기업의 회계처리 적절성을 감독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외부 감사인이 해외뇌물혐의를 발견하면 감사와 감사위원회에 알릴 수 있지 사법당국에 신고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4) 기업의 윤리·준법 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

해외뇌물의 예방을 위해서는 협약에 대한 기업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협약 인식제고를 위해 우리 정부의 실적은 협약 안내책자를 배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기업의 인식제고는 구체적인 시책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협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즉 윤리강령, 내부통제 시스템, 준법 프로그램 등에 대한 표준안 및 권고안을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2009년 이사회 권고와 부속서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기업에 해외뇌물예방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상당한 주의와 적절한 감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정부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기업에 해외의 협약위반 사례 등 국제동향을 제공하여 반면교사로 삼게 하는 등의 정부지원도 필요하다.

5) 해외뇌물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현재 우리나라는 혐의거래보고제도에 따라 뇌물혐의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 등 주무당국에 신고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패범죄 기업의 정부조달과 계약에 행정적 제재를 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외) 뇌물 기업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계약 배제에 실효성을 확립하고 필요시 적절한 공조수사가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약 부속서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중대한 기밀이 아닌 경우 해외뇌물에 대한 정보를 민간과 학계에 제공하여, 해외뇌물 방지를 위한 사례연구 및 정책 개발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법집행기관과 유관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 제고

법무부, 외교통상부, 검찰,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유관기관의 해외뇌물에 대한 협력을 제고하고, 유관 민간단체인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경총, 무역협회, 그리고 학계 및 시민사회와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뇌물 등 부패의 감지를 통한 부패 예방과 부패한 경쟁자로 인한 피해자의 예방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정보교류와 협력은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7)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선과 인식 제고

지난 해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범위의 포괄성 등에서 상당히 발전된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익명신고가 보장되지 않고, 언론 등에 대한 신고가 보장되지 않은 점과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아직도 개선 여지가 남아있다. 익명신고의 경우 신고를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신고 된다면 정부가 우려하는 바처럼 신고남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적 특성상 언론제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꾀해야 할 것이다.

8) 수사·기소권을 가진 법집행기관에 대한 청렴의무 강화

해외뇌물에 대한 예방과 적발, 처벌을 위한 조치만큼 중요한 것은 이를 주관하는 법집행기관의 청렴성이라고 할 수 있다. 법집행기관 공직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청렴평가를 통해 청렴의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OECD 뇌물방지협약」은 강제력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국제협약의 일반적 성격에 비해 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비교적 높은 협약이다. 이는 동료압력과 심사제도라는 협약의 이행평가 메커니즘에 기인하는데, 협약 당사국에 대한 이러한 이행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협약의 강제력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행평가 과정은 동료 국간 견제의 과정이자 학습의 과정이 되었고, 1999년 시행된 당시 당사국간 합의가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한 합의 수준을 점차 높여갈 수 있었다. 2009년 이루어진 이사회 권고와 그 부속서는 협약에서 미처 담지 못했던 규제와 개선안이 담겨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1단계 평가는 1999년 7월에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협약 이행을 위한 입법조치로 형법의 개정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의 방식을 택했다. 즉 협약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정하였고, 입법심사인 1단계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협약의 내용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2단계 평가와 3단계 평가는 협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로, 각각 2004년과 2011년에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OECD로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제정 등에 대해 고무적 평가를 받았으나, 급행료 허용 문제, 법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범죄수익의 몰수, 처벌의 미약함 등이 지적되었고, 기업의 내부통제제도의 확산과 협약에 대한 인식제고, 신고체계 강화 등이 권고되었다.

우리나라는 협약 이행에 있어서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좋은 성적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쉬움과 개선점은 있으나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는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OECD의 2011년 최종보고서에서는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미비점을 지적한다. 처벌 규정은 있으나 실제 처벌은 약하고, 적발은 소극적이고, 법 제정 후 시행령에서 후퇴되는 등의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이런 현실은 우리 정부가 협약을 수동적 태도로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먼저 협약에 대한 능동적 관점의 필요성이다. 즉 이행평가를 받는 수검국으로서의 소극적 자세를 탈피하여, 반부패와 해외뇌물금지를 국가 경쟁력 수단의 관점으로 대처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둘째로 협약이행을 국가 반부패 시스템 정비의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본 연구의 평가 결과, 국내 뇌물관련 범죄 처벌수준이 오히려 협약의 처벌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균형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국내 부패 관련법에 대한 개정으로 징역형에서의 벌금 병과, 뇌물수익에 대한 가중처벌,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 협약의 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보완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 반부패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시사점은 민간부패를 규제·선도하는 반부패 정책의 필요성

이다. 민간부패에 대한 소극적 정책은 오히려 우리 기업이 국제상거래에서 치명적 손실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들에게 협약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원과 규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책 시사점에 따라 이행법의 개정, 양형기준 확립과 몰수 추정 기준마련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기업의 윤리·준법 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 해외뇌물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법집행기관과 유관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 제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선과 인식 제고, 수사·기소권을 가진 법집행기관에 대한 청렴의무 강화를 협약이행을 위한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이제 우리는 협약을 능동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의 협약 이행요구에 쫓아가기 보다는, 국가 경쟁력 수단의 하나로 협약을 이해하고, 우리의 국가 반부패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서 협약 이행에 앞서가는 능동적 관점이 필요하다. 지난 2008년 우리나라는 또 다른 부패방지협약인 「유엔반부패협약(UNCAC)」을 비준하였다. 유엔반부패협약은 OECD 뇌물방지협약에 비해 민간부문의 부패를 포괄하고, 시민사회의 부패감시를 조장하는 등 훨씬 광범위해졌으나, 이행평가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이행에 대한 압박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그러나 유엔반부패협약 역시 점점 우리를 압박해 올 것이다. 이것은 다른 차원으로 해석하면 반부패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바로 지금이 반부패를 국가경쟁력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참고 문헌>

- 국민권익위원회. (2011). 「OECD 뇌물방지협약가이드북」
- 권은경·신동춘. (1998) OECD 뇌물방지 협정의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 연구, 「국토」 206: 52-53, 국토연구원
- 김종범. (1997). OECD 뇌물방지협정에 따른 국내입법현황과 시사점, 「KIEP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준기. (2003). 범세계화와 문화 변동, 다자간 차원에서의 해외 뇌물 규제에 관한 연구-국제반부패운동과 문화의 충돌, 「현상과인식」 27(3): 101-119,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김희철. (2000).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부패라운드의 영향과 대응전략, 「관세학회지」 1(2): 165-190, 한국관세학회
- 박석범. (2004). OECD 뇌물방지협약과 이행 동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지현. (2001). OECD 뇌물방지협약 후속조치와 향후 정책과제, 「월간 KIEP 세계경제」, 2001년 4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성문엽. (2004). OECD 뇌물방지협약과 우리나라에 대한 이행심사 결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신동화. (1999). OECD 뇌물방지협약 발효의 의의와 시사점, 「월간 KIEP 세계경제」 1999년 2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오규진. (2011). OECD 뇌물방지협약과 한미의 국내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충원. (2011). 미국 FCPA 반뇌물규정과 미국기업의 실무적 대응, 「무역학회지」 36(2): 83-115, 한국무역학회
- 이상용. (1998).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동향, 「연구총서」 98(15): 9-13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근호. (1999). 「OECD 부패방지협약과 후속이행조치에 관한 논의와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장준호. (2002). 주요국의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실태와 문제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은경. (2003). OECD 국가에 있어서의 부패방지정책의 평가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한국행정학회. 「춘계심포지엄 발표논문집」.
- 조은경·장근호. (2000)a. 「새무역장벽-기업의 부패라운드 대처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 _____. (2000)b. 「국제부패방지대책 최근동향-OECD 부패방지협약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 OECD. (1996). *Implementation on the Recommendation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Report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to the Council at Ministerial level*, OECD Doc. OECD/GD(96)83
- _____. (1997). *Revised Recommendation on Combating Bribery in International*

- Business Transactions*, OECD Doc. C(97)123/FINAL
- _____. (1999). online. *Korea review of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1997 recommendation*. July 1999
- _____. (2004). online. *KOREA: Phase 2 report on the applica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the 1997 recommendation on combating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November 2004
- _____. (2007). online. *KOREA: Phase 2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hase 2 recommendations*. March 2007
- _____. (2011). online. *Phase 3 report on implementing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in Korea*. October 2011
- _____. (2011). online. *Steps taken to implement and enforce the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June 2011
- Fritz Heimann, Gillian Dell & Kelly McCarthy. (2011). *Progress report 2011–enforcement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Transparency International
- Fritz Heimann & Gillian Dell. (2009). *Progress report 2009–enforcement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Transparency International
- _____. (2010). *Progress report 2010–enforcement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Transparency International
- Shearman & Sterling LLP. (2010). *FCPA Digest of Cases and Review Releases Relating to Bribes to Foreign Officials under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March 4, 2010) <http://www.shearman.com/files/upload/FCPA-Digest-Spring-2010.pdf>
- http://www.oecd.org/document/23/0,3746,en_2649_34859_44588887_1_1_1_1,00.html
- <http://www.transparency.org>

투고일자 : 2012.02.13

수정일자 : 2012.03.20

게재일자 : 2012.03.27